

논란때마다 “송구스럽다”는 靑... 무너진 인사검증

김기식·유은혜·조동호 등 인사문제 논란때마다 사과
민정·인사수석부처 경질을
4·3 보궐선거 악영향 전망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및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만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조 후

보자는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각각 직면해야 했다.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고개를 든 논란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하지만 청와대의 “송구스럽다”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계와 여론의 시선은 심상치 않다. 인사 논란을 직면해 고개를 숙인 청와대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기억

이 맞으면 청와대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지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은혜)과 국방부 장관(정경두)은 작년 9월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을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던 김기식 전 의원은 ‘여비서 동행 외유 출장’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향후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연일 계속되는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다. (다만) 마치 소약을 처단하는 척

하며 거약을 보호하려는 듯 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조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부터 경질해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철저히 검증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지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도 했다. [메트로신문 3월31일자 <‘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기사 참고]

한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는 다가올 4·3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교성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국민 눈높이 무시한 靑 “다른 후보자에 대한 조치는 없다”

“7대 비리 원칙 흐려져” 지적도



고개 숙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지명철회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자진사퇴 절차를 31일 각각 밟았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슷한 논란을 직면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는 현재로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지금 야당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도 반대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취재진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과 연관이 깊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며 대기업 이해를 대변한 인사”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그를)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문화

예술인과 영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조치”라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탈세 등 의혹을 직면하기도 했다.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 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한 후 인사들을 살펴보면 최재현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후문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조 후보자(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자진사퇴) 조치만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돌아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여야 엇갈린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태울까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한차례 남아
與 “공수처 수사·기소권 모두를”
野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3월 임시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 5일 본회의 한 차례만 남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쟁 중인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다.

화두인 법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을 경우 검찰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은 갖되 기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다 뜻을 밝혔다.

다만 바미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권한 분리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바미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등 일부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수사권은 검찰이, 기소·수사통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권은 검찰이 갖으면 된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조직인 만큼 권한이 있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 장자연 ‘성접대’ 사건이나 최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덮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검찰 거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송 ▲차기대선 이후 3년 유예 등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첫 번째 안은 검찰이 기소 거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거부되거나 무력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두 번째는 차기대선이 지나고 3년 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집권 정당의 칼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수사·기소권은 모두 갖는다.

한편 공수처 설치 논의는 23년 전 15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996년 12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에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20년 넘게 해묵은 법안이지만, 현재 여야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을 신속 처리안에 태울 수 있을진 미지수다.

/석대성 기자 bigstar@